

##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

2017. 3. 31

관계기관 합동



### 목 차

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취약계층 대상별 현황분석 .....	2
III.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.....	7
1. “취약계층 자립자금” 지원 신설 (공통) .....	8
2. 교육비·주거비 지원 강화 (공통) .....	9
3. 지원대상별 추가 지원 사항 .....	10
4. “취약계층 금융서비스이용 도우미” 도입 (공통) .....	12
IV. 향후계획 .....	13

## I. 추진배경

□ 그간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**일률적인 신용도 및 소득 기준**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을 선정\*\*

\* 예)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(미소금융),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/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(햇살론 등)

\*\*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자금지원은 미소금융 '장애인 자립자금'이 유일

○ 지원대상 범위 내에 다양한 계층이 포함\*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대상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**동일한 내용의 지원**이 이루어짐

\* 예)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는 '16년말 기준 총 439만명

⇒ 취약계층 금융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**대상별 특성**을 고려하여 **자활·자립에 필요한 분야를 중점 지원**할 필요

□ 한편, 저소득 취약계층은 자금수요는 높은 반면, 금융 접근성이 낮고 정보도 부족하여 **고금리 불법사금융**에 노출될 위험\*이 큼

\* '16년 금감원 불법사금융센터 신고건수 중 "미등록 대부" 관련 신고가 크게 증가 ('15년 1,220건 → '16년 2,306건)했으며, 이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한 영세 자영업자,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

○ 특히, **금융이용 경험이 부족**한 취약계층에게 상환능력에 맞는 채무발생, 계획에 따른 상환 등 **신용관리 교육 및 안내** 필요

⇒ 자립의지와 상환능력을 갖춘 취약계층에 대해 **복지수급에서 금융지원으로의 전환**을 위한 자금지원과 신용교육 등 병행

## II. 취약계층 현황분석

◆ 보다 정교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각 지원대상별\* **현황 및 애로사항 등 분석 실시**

\*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취약가구로 분류하는  
①한부모가족 ②조손가족 ③다문화가족 ④북한이탈가족(주민) 대상 분석

① **현황분석** : 통계청 및 각 부처 **국가인종 통계자료\*** 분석

\* 2015 인구주택총조사,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,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, 2010 조손가구실태조사,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,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등

② **애로사항** : 지원대상자 심층면접,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**간담회** 등을 통해 지원대상별 금융관련 애로사항 수집

➡ 지원대상별 자립·자활에 필요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마련

### 1 한부모가족

◆ **연평균 가구소득**은 일반가구 대비 약 62.5%로 낮은 편이나, **고용률(87.4%)이 매우 높고, 자립 의지가 강한 편**

◆ **생계자금, 양육 및 교육관련 비용 지원 희망**

### 가. 현 황

□ **(구성)** '15년 한부모가족은 전국 206만 가구\*(母子 152만, 父子 54만)로 전체 가구(1,911만 가구)의 약 10.8% 차지

\* 다만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인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)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은 전국 약 56만 가구(2.9%)

□ **(소득)** '16년 한부모가족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,054만원으로 전체가구 소득(4,883만원) 대비 약 62.5% 수준

○ 법에 따른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 중 41.5%는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지원 대상(기초생활수급자 13.5%, 저소득 한부모 및 차상위계층 28%)

- (고용) 한부모의 87.4%가 근로활동 중으로 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(60.3%)보다 높으며, 취업 한부모의 5.5%는 부업 중

## 나. 애로사항

- 쉰연령대에 걸쳐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'양육비·교육 비용 부담'인 것으로 응답
  - 특히,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교육비 이외의 교육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

## 2 조손(祖孫)가족

- ◆ 가구소득은 일반가구의 약 44.5%로 매우 낮으나, 고령에도 불구하고 약 40%는 조부모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수행
- ◆ 양육·교육비 부담, 조부모 건강 문제 등이 주요 애로사항

## 가. 현 황

- (구성) '15년 조손가정\*은 전국 11만 가구(조부모+손자 4만, 조부 또는 조모 + 손자 7만)로 전체 가구(1,911만 가구)의 약 0.6% 차지
  - 조부모 평균연령 만 72.6세(조부 만 73.1세, 조모 만 75세), 손자녀 평균 연령은 13.3세이며, 가구당 양육자녀 수는 평균 1.4명
- (소득) '16년 조손가정 연평균 가구소득은 2,175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(4,883만원) 대비 약 44.5% 수준
  -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의 비중(31.3% / 전체가구 평균 65.6%)이 낮고, 공·사적 이전소득의 비중(51.0% / 전체가구 평균 7.0%)이 높음
- (고용) 조부모가 자체적으로 생계를 책임\*지는 가구는 약 39.1%이며, 정부나 공공기관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46.7%

\* 생계책임자의 직업은 단순노무직(20.2%), 기타(39.6%), 농·임·어업(17.4%) 등

## 나. 애로사항

- 손자녀의 양육·교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으며, 공교육 이외의 교육비 지원을 희망
- 약 70% 이상의 조부모가 건강문제\*를 겪고 있으며, 이로 인한 긴급 의료비 발생, 생계자금 부족 등의 문제를 우려

\* 6개월 이상 만성질환 40.8%, 앓은 질병 33.1% 등 70% 이상이 건강문제

## 3 다문화가족

- ◆ 취약계층 중 가구소득이 가장 양호하며, 고용률도 높은 편
- ◆ 금융지원 이외에도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희망

## 가. 현 황

- (구성) '15년 다문화가구\*는 29.9만 가구로 전체 가구(1,911만 가구)의 약 1.6% 차지
  - \* 결혼이민자·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
- (소득) '16년 다문화가정 연평균 가구소득은 4,328만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88.6% 수준
- (고용) 결혼이민자·귀화자의 고용률은 63.9%(女 59.5%, 男 83.4%)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(60.3% / 女 49.9%, 男 71.1%)보다 높음

## 나. 애로사항

- 금융거래시 언어문제 등으로 상담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문서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, 이와 관련한 지원이 필요
- 취업교육·컨설팅 등도 집단교육 보다는 특화된 교육을 희망

#### 4 북한이탈주민

- ◆ 소득 및 고용률은 낮은 수준이나, 지속적인 개선 추세
- ◆ 사회적응을 돕는 특화된 교육 및 생계자금 지원 등 희망

##### 가. 현 황

- (구성) '16년말까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30,212명(누계)
- (소득) '16년 북한이탈주민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2.9만원으로 일반국민(236.8만원)의 68.8% 수준이나,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
- (고용) '16년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고용률은 55.0%로 전체 국민 고용률(60.3%)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,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추세\*

\* 북한이탈주민 평균 고용률(%) : ('12) 50.0 ('13) 51.4 ('14) 53.1 ('15) 54.6 ('16) 55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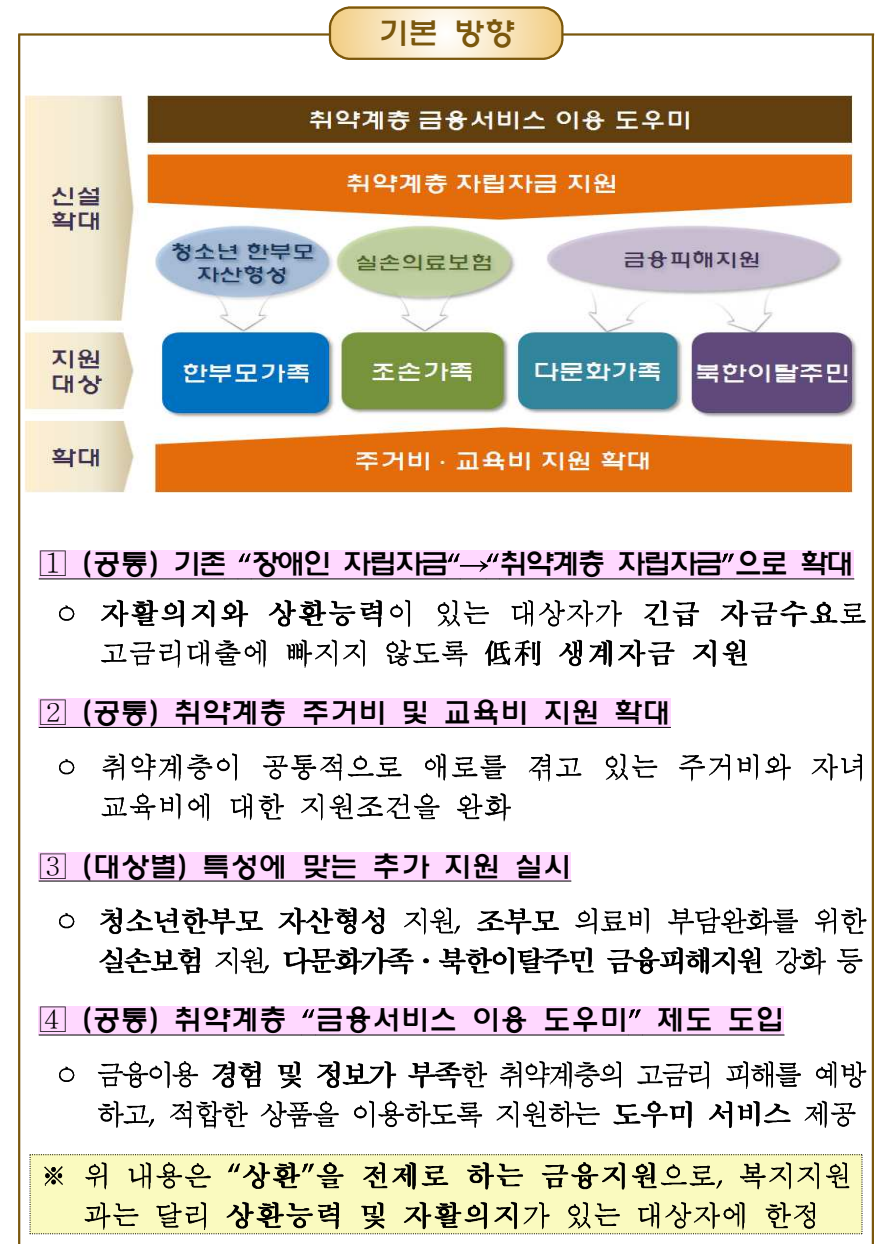
##### 나. 애로사항

-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취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, 남한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
- 취업교육·컨설팅 등도 집단교육 보다는 특화된 교육을 희망

< 취약계층 특성 비교분석 >

구분	전체가구/국민	한부모가족	조손가족	다문화가족	북한이탈주민
구성	1,911만 가구 (100%)	56만 가구 (2.9%)	11만 가구 (0.6%)	30만 가구 (1.6%)	3만명 (0.06%)
연소득	4,883만원 (100%)	3,054만원 (62.5%)	2,175만원 (44.5%)	4,328만원 (88.6%)	월 임금 162.9만원
고용률	60.3%	87.4%	39.1%	63.9%	55.5%
애로 사항	-	양육교육비 생계자금	양육교육비 생계자금 건강문제	양육교육비 생계자금 언어문제	생계자금 적응문제

#### Ⅲ.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



## 1 기존 “장애인 자립자금”→“취약계층 자립자금”으로 확대(공통)

- ◆ 자활의지가 있으나,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低利의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하여 자립기반 마련 지원

### 가. 도입 필요성

-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자금 수요 발생시 低利자금을 지원하여 고금리 대출에 빠져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(현재 미소금융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低利 자립자금 지원 중)

### 나. 상품 주요내용

- (대상)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①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
- 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
- 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
- ④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
- ⑤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(기존 '장애인 자립자금'과 동일)

- (조건) 최대 12백만원, 금리 연 3.0%,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(거치기간 1년)
- (용도) 생활안정자금(생계자금)
- (취급기관)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 지점
- (시행시기) '17. 5. 2일 시행 예정

### 다. 기대효과

- 최대 100만명이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

## 2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강화(공통)

- ◆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의 일반 주거비·교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경감

### 가. 도입 필요성

- 저소득 취약계층일수록 생활비중 주거비 비중이 높으며, 애로 사항 청취 결과, 모든 계층에서 교육자금 지원 필요성 제기

### 나. 상품 주요내용

#### 주거비 지원

- (대상) '취약계층 자립자금' 지원 대상 중 85㎡ 이하 주택(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)에 거주하는 자
- (조건) 최대 2천만원, 금리 2.5%, 2년 이내 원금일시상환
- (용도) 주거 임차보증금

#### 교육비 지원

- (대상) '취약계층 자립자금' 지원 대상 중 초·중·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
- (조건) 최대 5백만원, 금리 4.5%,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(거치 1년)
- (용도) 교육비
- (취급기관 및 시행시기, 공통)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 지점 / '17. 5. 2일부터 시행 예정

### 3 지원대상별 추가 지원사항

- ◆ 공통지원사항 이외에도 각 지원대상별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추가 지원을 실시하여 맞춤형 금융지원 도모

#### 1)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지원

##### 가. 도입 필요성

- 청소년 한부모가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 및 학업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

##### 나. 주요내용

- (대상) 만 24세 이하\*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주로서 차상위 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

\*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'청소년 한부모' 연령기준

- (지원방식) 청소년 한부모가 시중은행의 한부모가족 우대적금(금리 최대 4.0~6.2%) 만기 해지시, 진흥원이 최대 월 10만원까지 연 금리 2.0% 추가 지급 ➡ 최대 연 8.2%의 이자 수취

- (취급기관 및 시행시기)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지점 / '17. 5. 2일부터 시행 예정

##### 다. 기대효과

- 상품가입 가능 대상은 약 3천명\* 내외의 청소년 한부모
- \* '15년 기준 24세 미만 미혼모(부)는 총 2,777명(모 2,279명, 부 498명)

#### 2) 조손가족 조부모 소액실손보험 지원

##### 가. 도입 필요성

- 자활의지 및 상환능력이 있어 자립자금을 지원받은 조부모가 건강상의 문제로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

##### 나. 상품 주요내용

- (대상) 조손가정(조부모, 조부 또는 조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) 가구주로서 '취약계층 자립자금'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자
- (방식) 생계자금 상환기간 중 해당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지원(보험료 전액 지급, 최대 5년)
- (취급기관 및 시행시기)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지점 / '17.6월부터 시행 예정

#### 3) 다문화가족·북한이탈주민 금융사기 등 피해지원

##### 가. 지원 필요성

- 언어 및 사회 적응 문제 등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·북한이탈주민들은 이로 인해 금융사기피해에 취약

##### 나. 지원 주요내용

- (대상) 다문화가족 가구주 또는 북한이탈주민\*으로서 연소득 2천만원(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 4천만원) 이하인 자로서 금융관련 피해\*\*가 있는 자

\*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

\*\* 보이스피싱, 불법사금융, 무인기 투자사문, 펀드 불완전판매 등

- (조건) 최대 5백만원, 연 금리 2.5%\*,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

\* 기존 '새희망힐링론'의 취약계층 특별 우대금리

- (용도) 금융피해자의 의료비, 생활비 등 긴급생활안정 자금

- (취급기관 및 시행시기)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신용회복위원회 지부) / '17. 4월중 시행 예정

#### 4 취약계층 “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” 제도 도입(공통)

- ◆ 제도권 금융 이용경험 및 관련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‘금융서비스이용 도우미’를 제공하여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

##### 가. 도입 필요성

- 취약계층이 고금리 불법사금융 등의 피해를 입지 않고,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필요

##### 나. 주요내용

- (대상) “취약계층 자립자금” 지원대상자와 동일
- (지원내용) 정책서민자금 또는 금융회사 대출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이용 안내 및 상담, 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 등을 실시
- (신청방법)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397 통합콜센터를 통해 “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 상담” 신청
- (시행시기) ‘17.6월부터 시행 예정
-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우미 선정(‘17.4월) → 사회복지사, 금융회사 담당자 등을 통한 도우미 통합교육 실시(‘17.4~5월)

##### 다. 기대효과

- 정부수급 등에 익숙한 취약계층에 대해 상환능력을 기초로 한 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
- 사전교육을 통해 고금리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

#### IV. 향후계획

- ◆ 각 과제별로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상반기 중 모든 과제 시행 마무리

- ① “취약계층 자립자금” : ‘17.5.2일 시행 예정
- ② 취약계층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강화 : ‘17.5.2일 시행 예정
- ③ 지원대상별 추가지원 사항
-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프로그램 : ‘17.5.2일 시행 예정
  - 조손가족 조부모 소액 실손보험 지원 : ‘17.6월 시행 예정
  - 다문화가족·북한이탈주민 금융피해 지원 강화 : ‘17.4월중 시행
- ④ “취약계층 금융서비스이용 도우미 제도” : ‘17.6월 시행 예정

##### < 과제별 주요 추진일정 >

과제	추진일정	조치사항	소관
① 취약계층 자립자금 확대	‘17.5.2	업무방법서 개정 전산시스템 준비	진흥원
② 취약계층 주거비/교육비 지원 강화	‘17.5.2	업무방법서 개정 전산시스템 준비	진흥원
③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프로그램	‘17.5.2	세부사항 협의 전산시스템 준비	진흥원 금융회사
④ 조손가족 조부모 소액실손보험	‘17.6월	세부사항 협의 전산시스템 준비	진흥원 금융회사
⑤ 다문화가족등 금융피해지원 강화	‘17.4월중	업무방법서 개정 전산시스템 준비	신복위
⑥ 취약계층 금융서비스이용 도우미	‘17.6월	도우미 선정·교육 등	진흥원